July 2023

대한민국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2023~2027)

대한민국정부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개요

대한민국 정부는 정책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 부패 방지, 포용적 디지털 전환 등 열린정부 구현을 위한 원칙과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 참여 이후 다섯 차례에 걸친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열린정부와 민주주의를 향한 대한민국 정부의 열정과 실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OGP 초대 회원국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제11대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서밋(OGP Global Summit)을 주관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1년간 다섯 차례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총 53개 과제를 이행했다. 1차에서 3차 까지의 실행계획은 정부가 앞장서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으나, 제4차 실행계획(2018~2020)부터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되어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수립과정을 이끌었다. 이러한 노력은 OGP가 제4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민의 영향력(Level of public influence)을 '참여' 단계에서 '협력' 단계로 상향 평가한 결과로도 나타났다. 이후 제5차 실행계획(2021~2023)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시민사회의 성장기반 마련' 등 주요 과제를 발굴하였고, OGP는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활동을 우수하게 평가하고 이를 OGP 모범사례로 국제사회에 공유하기도 하였다.

2023~2027년을 이행 기간으로 하는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은 그간 변화된 국제적인 환경 요인들을 고려하고, 다섯 차례의 열린정부 실행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을 통해 얻은 교훈과 평가를 토대로 수립하였다. 또한 새롭게 개정된 OGP 운영 규정에 따라 2개년이 아닌 4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일반 국민, 시민사회단체, 학계 및 정부기관들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7개 중앙정부와 22개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로서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발전시키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제3기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정부	행정안전부(위원장, 간사), 국무총리비서실,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민간	한국투명성기구(위원장), 사단법인 오픈넷(간사), 정의연대, 행정개혁시민연합, 단국대학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로앤컴퍼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레티스랩, 가천대학교, 코드포코리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청주YWCA,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에코맘코리아

2022년 10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국민을 상대로 열린정부 과제를 공모한 결과 투명성, 반부패, 참여 분야에서 51건의 국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와 더불어 국정과제 등에서 열린정부 가치와 관련성이 높은 22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이후 열린정부위원회 주관으로 OGP 가치와의 정합성, 제안의 실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77개의 과제 중 22개의 과제가 1차로 선정되었고, 이후 정부기관들과의 후속 협의를 통해 10개의 과제가 2차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논의된 실행계획 과제들을 숙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열린정부위원회와 함께 OGP가 주관하는 세계열린정부주간(2023.5.8.~5.12.)을 계기로 민·관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사회, 국제협의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고, 제6차 실행계획으로 논의된 과제의 국민제안자와 정부 기관들이 함께 숙의 과정을 거쳤다.

정부는 대국민 공모와 민관합동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열린정부 실행계획 초안에 대하여 온라인에서 2주간(2023.6.26.~7.9.) 대국민 의견조회를 진행했고, 그 결과 '좋아요', 응원의 댓글 등 국민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마련부터 시민사회와 관계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약 1년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총 10개의 과제가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의 최종과제로 선정되었다.

반부패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디지털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시민참여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다만, 숙의과정에서 과제화되지 못한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민간위원의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제언에 대해서는 다음 실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고, 향후 열린정부 실행계획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제언을 숙의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도 열린정부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민관협력 거버넌스 증진을 통한 개방성·투명성·민주성 등 열린정부 가치를 구현하는 데에 앞장설 것이다.

반부패 분과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반부패분과위원회의 논의를 거쳤으나, '법률용어 개선'과 '명예훼손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비범죄화' 등의 제언은 최종적으로 실행계획 과제로 선정되지 않았다. '법률용어 개선'은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이 사용된 법률을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하여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각종 사회 부조리 고발 활동을 위축시키며 부조리한 진실들을 은폐시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과 같이 명예훼손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필요하다. 이상 2개 제언에 대해서는 반부패분과위원회 차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토론회나 세미나 등의 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하여 국가 투명성 확보 및 한국의 부패지수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디지털 분과	디지털분과위원회에서는 열린정부 실행계획 마련 과정에서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등 디지털정부와 관련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구체적인 개선점이나 정책 대안 등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디지털분과 내에 워킹그룹 또는 TF 형태로 가칭 디지털정부 이용자포럼을 설치하여 열린정부위원회 위원 및 기타 전문가, 이용자를 초청하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구체적인 개선점이나 정책 대안 등을 모색하는 열린 공론장 형태로 운영하고, 포럼 논의 결과를 디지털정부 관련 국민의견 수렴 창구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참여 분과	열린정부 실행계획 마련을 위해 공모를 통해 수렴된 국민제안에 대해서 국민참여분과위원회에서 숙성회의 등을 진행하였으나, '에너지 데이터의 공공성 제고' 등의 제언은 최종과제로 선정되지 않았다. '에너지데이터의 공공성 제고'는 국내 정부의 통합적인 정보축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전 정부적 과제이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환경데이터, 정보의 시민접근성 제고와 정보공유를 위한 정부의 실천을 촉구하는 연대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기후변화와 관련한 오픈데이터 전략' 조사보고서(2021년)를 발간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실천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에너지데이터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부문별, 공정별로 세분화된 에너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정보제공 플랫폼의 실질적 정보제공과 공유,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6차 열린정부 실행계획 과제목록

분야	연번	과제명	협업 기관
반부패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통합기획단)
디지털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5	디지털 안심·포용사회 구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국민참여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행정안전부(혁신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총괄과)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9	열린관광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1. 반부패 공익신고 보호·지원 강화

■ 협업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시민영역 보호 및 확대로 '시민참여 활성화' 및 '반부패'에 기여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반부패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반부패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1.)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반부패분과 토론회 (2023.5.10.)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공익신고제도는 행정 권력과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쉽지 않은 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 등 사회 전반의 부패 통제를 위한 효율적 제도이다. 이에 세계 주요 국가는 물론 우리나라도 공익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공익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익 관련성이 높음에도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구, 부정청탁, 이해충돌행위' 등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별로 보호 및 지원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과제 내용

공익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정비

-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부정청구, 부정청탁, 이해충돌행위* 등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현재의 법체계를 개선하여 어떠한 부패 관련 및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동일한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에 신고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지원 수준 범위의 확대

- 공익침해 행위의 포괄적 규정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대상 법률을 개정하여 '공익침해 행위' 범위를 확장한다.
- 공익 관련성이 높음에도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누릴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들을 검토하고 공익 관련성이 높은 법률의 경우 공익신고 대상으로 포함시킨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 법률을 추가

-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으로 확대하고 이를 홍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서 벌어지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한다.

기대 효과

공익 신고자 보호·지원제도를 정비하고, 공익 신고자 보호·지원 수준 범위를 확대하여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시민들의 반부패 참여를 독려하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에 대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관련 법령 마련 및 시행	2023.6.22.	계속
신고자 보호·지원제도의 정비를 위한 입법 추진	2023.8.1.	계속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 관련 입법 추진	2023.9.1.	계속

2.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개방·확대 및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 협업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행정심판통합기획단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행정심판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부패 방지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반부패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반부패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1.)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반부패분과 토론회 (2023.5.10.)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나 이익을 구제하고자 할 때 일반인이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보공개 강화를 통해 열린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내용

행정심판 참여 확대를 위한 청구서·신청서 자동완성 서비스 및 맞춤형 사례제공 등 리걸테크(LegalTech)*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한다.

*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온라인 서비스

① 데이터 개방·확대

행정심판 데이터를 기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변환하고 공개 건수를 확대하여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는 열린정부 구현'에 기여한다.

② 맞춤형 사례제공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내용과 과거 완료된 사건의 연관 분석을 통해 청구인 상황과 유사한 맞춤형 사례를 제공한다.

③ 청구서 자동완성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신청서 표준 서식에 맞게 자동완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적용기관 확대를 위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한다.

- 일반·특별 행정심판 등 123개 행정심판 기관의 행정심판 온라인 창구를 이지행정심판으로 통합하여 재결례 공개 확대 및 청구서·신청서 작성 편의를 제공한다.

기대 효과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례가 무엇인지, 청구서 작성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행정심판 재결 데이터 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며 청구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이지행정심판 구축 및 서비스 개시(1차 오픈)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등 51개	2022.7.1.	2023.6.30.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BPR·ISP·ISMP ※ 흩어져 있는 온라인행정심판 창구를 통합 및 행정심판 재결례 빅데이터 개방·확대를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및 이행로드맵 마련	2023.2.23.	2023.8.21.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 123개 온라인행정심판 시스템 통합과 빅데이터 재결 DB구축 및 위법·부당 유형별 재결례 공개 기반 마련	2024.1.1.	2025.06.30.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확대(2차 오픈) ※ 위법·부당 유형별 빅데이터 재결례 공개 확대 및 자동완성서비스 제공	2025.7.1.	2025.12.31.

추가 정보

국정과제 13번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과 연계시킨다.

3. 데이터 빈칸을 채우자,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까지 개방

■ 협업 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다양한 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정책의 포용가치 증진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디지털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디지털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19.)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디지털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우리나라는 2013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정책을 편 결과 77,272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세계 1위(OECD, 2019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의 다운로드 건수는 4,697만건(2022년말 기준)을 돌파했다.

예) 2022년까지 3차에 걸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168개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2,797개에 달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요소수 판매정보 및 코로나-19 마스크 재고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공공데이터 정책은 공급자인 행정·공공기관의 관점에서 추진되었으며, 수요자인 국민·기업 관점에서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을 여지가 있다. 이는 수요자가 행정·공공기관이 미공개 데이터를 포함한 보유 데이터 전체를 알 수 없었다는 점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뿐만 아니라, 미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관련 정보도 공개하여 국민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과제 내용

미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포함한 전체 공공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는 요청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미공개 사유를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필요시 법제도 개선).

① 공공

- 미공개 공공데이터 목록 등 정보를 제공한다.
- 미공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명, 생성기관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② **민간**

- 미공개 공공데이터 중 필요한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다.
- 관련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정책*을 통해 홍보한다.

  * 빠띠 시민공익데이터 실험실,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 등

③ **공공-민간 협력**

- 공공데이터 기본(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미공개 공공데이터를 재검토하여 전면 개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 오픈데이터포럼 등 민·관이 함께 하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통하여 미공개 데이터가 공개될 수 있도록 논의한다.

기대 효과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데이터 제공 확대로 공공데이터 활용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국민이 직접 공공데이터의 개방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국민 스스로 공공데이터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범정부 중장기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2023.6.	매년 계속
미공개 데이터 개방을 위한 전문 연구반 운영	2023.6.	매년 계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추진	2023.6.	매년 계속
제4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이행	2023.6.	2025.12.
제5차 공공데이터 기본계획 수립·이행	2026.1.	2027.5.

4. 민원 빅데이터 모니터링을 통한 국민안전예보

■ 협업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한 공적 책임성 제고

과제 발굴 과정

- 정부과제 발굴 (2023. 2.)
- 디지털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디지털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19.)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디지털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최근들어 정부는 빅데이터의 가공과 분석을 통한 상황인식, 의사결정과 미래예측을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분야에서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들을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위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를 동시에 연계하여 분석해야 한다(신동희, 김용문, 2015, 국내 재난관리 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정책방안).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및 국민 생활에 직결되어 파급효과가 큰 이슈를 신속하게 포착하여 피해 발생 전 예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원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과제 내용

권익위원회가 운영중인 민원분석시스템의 국민안전 관련 민원데이터 및 포털사이트 실시간 뉴스를 수집하는 등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융합하여 분석한다.

국민의 안전 이슈를 도출하여 국민피해 확산 위험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한다.

■ 민원 예보 프로세스

발령기준

- 기본적으로 민원 발생 건수를 중심으로 하되,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 수, 지역 범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단계를 탄력적으로 결정한다.

발령방법

- '국민의 소리 주·월간 동향' 수록 및 민원분석 시스템에 등재한다.
- 소관 기관에 예보발령 공문을 발송한다.

사후관리

- 예보발령 후 민원 발생 추이 및 기관의 대응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 민원 발생 추이에 따라 예보 단계를 상향 또는 해제한다.
-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 결과를 언론홍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기대 효과

민원데이터와 공공·민간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사회 현안을 발 빠르게 포착하여 국민안전 예보 발령하여 적기에 정책에 반영·조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생명·안전 문제의 선제적 예방에 기여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한 정기예보·수시예보 발령	2023.2.	매월 계속

5. 디지털 안심·포용 사회 구현

■ 협업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한 공적 책임성 제고

과제 발굴 과정

- 정부과제 발굴 (2022.10.11.~11.14.)
- 디지털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7.)
- 디지털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19.)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디지털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 활용이 일상생활에서 더욱 만연하게 되고 있으며(예: 매장 내 키오스크 주문 등), 동시에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역량 격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시민이 집 근처 생활SOC를 활용한 '디지털 배움터'에서 쉽고 편리하게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신체적 이유로 '디지털 배움터'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 대상으로 방문 디지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예) 2020년부터 전국에 설치된 약 1천개소의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2022년까지 총 187만 명의 국민이 교육을 수강하였으며,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수준은 2019년 69.9%에서 2022년 76.2% 수준까지 상승했다. 2022년에는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버스를 활용한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하고, 정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4,000대 이상, 100종 내외의 다양한 ICT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과 고령층의 웹과 키오스크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과 민간의 접근성 보장 의무를 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성과를 환류하고 있다.

과제 내용

디지털 소외계층(노인, 장애인, 인터넷 비사용자 등)을 지속 발굴하고, 디지털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시간적·장소적 제약 없이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서비스를 차별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① 디지털 교육 확대

- 취약계층 청소년이 디지털 사회·경제 편입을 위한 미래를 그려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밀착 지원하는 사회복지인력의 디지털 역량을 키워 디지털 조력자로 양성함으로써 교육이 더 큰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디지털 교육체계의 구축, SW·AI 등 신기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ICT 보조기기 보급 및 정보접근성 확대

- 디지털 교육 및 ICT 보조기기 보급 확대, 공공와이파이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Leaving no one behind),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고령자와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UI) 리소스를 제공하는 등 접근성 개선 솔루션을 개발·보급한다.

기대 효과

디지털 교육 및 ICT 보조기기 보급 확대, 공공와이파이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Leaving no one behind), 누구나 디지털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디지털배움터 운영	2023.4.	계속
장애인 대상 ICT 보조기기 보급	2023.9.	2023.1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웹 접근성 실태조사	2023.9.	2024.3.

추가정보

대한민국 국정과제 ‘78-6, 대한민국 디지털전략 3-2’ 와 연관

6. 시빅테크(Civic Tech) 도입을 통한 민관 합동 현안해결

■ 협업 기관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영역 보호

과제 발굴 과정

- 정부과제 발굴 (2022.10.11.~11.14.)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국민참여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0.)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국민참여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사회문제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주도의 자율적·적극적인 사회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시빅테크란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사회현안과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민참여 운동이며, 시빅테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빅테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들 간의 연계 및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과제 내용

정부 정책 실행 과정에 데이터 제공, 국민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시빅테크(Civic-Tech)'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예: (정부) 장애인 시설정보 제공 + (시민) 데이터 활용 → 장애인 이동경로 제공 앱 개발

기대 효과

오픈데이터포럼을 통한 시민주도형 세미나 및 성과공유회 개최

① 세미나

포럼 구성원과 일반 시민 대상 수요조사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관련 분야 별 주요 이슈 및 주제 선정, 세미나·강연 등을 기획·개최한다.

② 성과공유회

오픈데이터포럼의 연간 활동 성과(리빙랩 우수사례 등)를 발표한다.

시빅테크, 리빙랩 운영

① 시빅테크

- 데이터의 사회적 가치를 민관이 공동으로 창출하고, 시민들의 데이터 활용 역량 제고를 위한 시빅테크를 활성화한다.
- 공공데이터 활용 시민 커뮤니티 지원,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해커톤을 개최한다.

② 리빙랩

-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의 공공데이터 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을 제공한다.
- 리빙랩 공모전 진행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유도한다.

민관 협력 체계 구축

- 사회적 현안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민관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23년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빅테크 운영	2023.6.1.	2023.12.31.
’24년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빅테크 운영	2024.6.1.	2024.12.31.
’25년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빅테크 운영	2025.6.1.	2025.12.31.
’26년 오픈데이터포럼 및 시빅테크 운영	2026.6.1.	2026.12.31.

7.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협업 기관 :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시민영역 보호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국민참여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0.)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세계열린정부주간 국민참여분과 토론회 (2023.5.12.)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나 낙인을 찍고 부당한 대우나 차별·폭력을 조장하여 그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그들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상당수의 국민은 혐오표현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에서 '정부 차원 종합적 혐오차별 대책 수립 필요하다'는 응답이 80.9%

사회적 해악이 극명한 혐오 표현에 대한 행위규제, 혐오표현에 대한 인식 제고, 반차별 정책을 비롯한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사회적 환경 마련,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정부(지방정부 포함)의 혐오표현 대응계획 등을 확인·공유하고, 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 각 영역에서 혐오표현 대응이 실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제 내용

대한민국 정부의 혐오표현 대응 계획 공유, 공공 부문, 기업, 언론(미디어), 연구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토론회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차별 및 혐오표현 대응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OGP 세계열린정부주간을 계기로 한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기대 효과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혐오표현 대응 정책 역량을 강화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정부(지방정부 포함) 혐오표현 대응 정책 현황 조사	2023.8.	2024. 5.
‘혐오표현 대응회의’(가칭) 개최 ※ 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참여	2023.8.	계속
’24년 세계열린정부주간 토론회 개최	2024.5.	
혐오표현 대응 정책 토론회 개최 ※ 국제 혐오표현 반대의 날(2024.6.18.)	2024.6.	
민관 영역별 혐오표현 대응 이행 현황 모니터링	2024.7.	계속

8.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및 인식 확산

■ 협업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소외계층 포용, 민간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국민참여분과 과제 숙성회의 (2023.4.20.)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장애자, 고령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나 군과 구 단위에서는 사업 추진이 미흡함. 또한, 안전/안심 사업은 장소 기반 사업으로 시군구 지자체 91%의 높은 비중이나 모든 이(범용)를 위한 디자인은 시 35.3%, 군 17.8%, 구 13.5%로 상대적 부족한 실정이다.

초고령 사회, 1인 가구 폭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을 비롯한 모두가 장애, 언어, 행위에 제약 없이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 보급 체계를 강화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활성화 및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

과제 내용

색약자, 노약자, 미취학아동, 외국인 근로자 및 이민자, 외국관광객 등을 고려한 실물 또는 디지털 사인물 및 색채 개선을 통해 한국형 유니버설 디자인 고도화 및 의식을 제고한다.

①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적용 및 지역 특성화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한다.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사업유형별 공공디자인 개선모델 개발, 전국 확산·적용 가능한 공공시설물 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유니버설 디자인 공공시설물 시범 적용

② 범부처 협력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 (2022) 해양안전·안내체계 가이드라인(해양경찰청), 한국형 과학관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국립중앙과학관)
- (2023) 교통·보행안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행안부), 소년 보호시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법무부)

③ 국민 참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개선 및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대국민 투표 선정과정 적용), 공공디자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우수 아이디어 발굴·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전문가 멘토링 워크숍 추진)

④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외국인 및 고령자 등 소외 약자들의 정보 인지를 고려한 시각정보 및 색채를 개선하고, 각 시·도·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국가 표준 체계를 정립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⑤ **유니버설 디자인 인식 제고 위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한다.**

-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을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공감, 공공디자인 토론회 통한 유니버설 디자인 교육

기대 효과

유니버설 디자인 체계 개선,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소외계층 포용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대상지 유형별 통합 공공디자인(유니버설디자인) 개선모델 개발 및 시범적용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2023.5.	2023.12. (연 신규 4개소)
범부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2023.6.	2023.12. (연 신규 2개처)
국민 참여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개선 워크숍 추진(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2023.7.	2023.10. (시상, 연 1회)
국민 참여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선정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2023.5.	2023.10. (시상, 연 1회)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및 토론회 개최	2023.10.	계속 (연 1회)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 표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2024.3.	2024.11.

9. 열린관광 환경조성

■ 협업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소외계층 포용, 민간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

과제 발굴 과정

- 국민/정부 제안공모를 통한 제안 접수 (2022.10.11.~11.14.)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2025년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층 등을 포괄하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모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과제 내용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 관광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 조성 및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① 환경적 측면

관광지 내 물리적 환경(경사로, 보행로, 단차 등 이용·편의시설 개·보수)을 개선한다.

※ 열린관광지 '23년 신규 20개소 선정, 누적 132개소

② 정보적 측면

- 무장애 여행코스를 발굴하고, 무장애 여행정보 DB의 개선·신규 확보(연 1,000개 목표), 그리고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을 고도화(관리운영) 한다.

③ 서비스 측면

- 투어 케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무장애 전문여행사의 육성과 지원, 관광 취약계층에 여행 기회를 제공(나눔 여행)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그리고 콘텐츠 개발 등을 실시한다.

기대 효과

열린관광지 조성을 통해 관광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23년) 열린관광지 신규 20개소 선정 및 조성	2023.1.	2023.12.
(’24년) 열린관광지 신규 30개소 선정 및 조성	2024.1.	2024.12.
(’25년) 열린관광지 신규 30개소 선정 및 조성	2025.1.	2025.12.
(’26년) 열린관광지 신규 30개소 선정 및 조성	2026.1.	2026.12.
(’27년) 열린관광지 신규 40개소 선정 및 조성 ※ ’27년 누적 252개소	2027.1.	2027.12.

추가 정보

국정과제 ‘61-2. 누구나 누리는 여행환경 조성’과 연관

10.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

■ 협업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정책과
■ OGP 가치와의 관련성 : 소외계층 포용, 민간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

과제 발굴 과정

- 정부과제 발굴 (2023.2.)
- 국민참여분과 회의에서 과제로 선정 (2023.3.16.)
- 민간위원-정부 담당자 간담회 (2023.4.28.)
- 대국민 의견조회(혁신24 OGP 토론게시판) (2023.6.26.~7.9.)

추진 배경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등으로 미디어 접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졌지만, 문화·여가 생활 대부분을 방송과 미디어에 의존하는 장애인들은 여전히 제약이 많은 상황이다.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이용과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정책이다.

과제 내용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이용 및 활용을 지원하고 정보접근권을 강화한다.

① 장애인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 (현황)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제공을 의무화하고,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방송물에 대한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과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있다.
- (계획) 장애인방송에 대한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장애인방송 콘텐츠의 수요자인 시각·청각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장애인 방송제작지원 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② 시각청각장애인의 기기접근성 강화

- (현황) 시각·청각장애인이 편리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맞춤형 기능이 탑재된 방송수신기(TV)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 (계획) 시각·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TV) 수급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및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개선점을 도출하고, 향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기대 효과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과 기기접근성 제고를 통해 시·청각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추진계획

세부 계획	시작일	종료일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계속	계속
장애인방송 만족도 및 이용실태 조사	계속	계속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연 20,000대)	계속	계속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만족도 및 이용실태 조사	계속	계속

추가 정보

국정과제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과 연관

대한민국정부